

환경 정책,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배출권거래제 시장확대 등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부 주요정책 10개 선별

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.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

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(이하 할당업체)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, 은행 및 보험사,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 또한,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(한국거래소)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, 이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.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.

②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(테크) 기업 1.5조 원 규모 보증

그간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.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(1,400억 원 규모)이 새롭게 추진된다.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·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(테크)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심으로 1.5조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③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·관리

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·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,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*이 승격된다.

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,069km(89곳)가 된다.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,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.

* (지정 : 8곳) 주천강, 단장천, 동창천, 위천, 병천천, 조천, 오수천, 천미천 / (연장 : 2곳) 갑천, 삼교천

④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

‘수도법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,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.

⑤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

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.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(EU)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,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.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(취급시설 검사 주기, 영업허가 의무 등)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.

⑥ 지역여건·환경영향 고려,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

‘환경영향평가법’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·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·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. 또한,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,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.

⑦ 청년과 다자녀가구,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

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‘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’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%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%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(100~300만원)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⑧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

‘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‘자전거 이용’과 ‘잔반제로 실천’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. 또한,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,000원에서 2,000원으로 조정된다.

⑨ 건강피해조사-분쟁조정-피해구제 일괄(원스톱) 서비스 시행

그간 환경피해조사(환경부)·분쟁조정(환경분쟁조정위원회)·피해구제(환경산업기술원 위탁)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. ‘환경보건법’, ‘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’, ‘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(舊 ‘환경분쟁조정법’), ‘석면피해구제법’, 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-분쟁조정-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.

⑩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

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.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*에 따라 2025년 50%, 2045년 80%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.

*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

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“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신·구 대비표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최민지 (044-201-6330)
		담당자	서기관	정윤화 (044-201-6331)

연번	정책명	변경 전	변경 후	관련규정(시행일)
1	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시장참여자) 배출권할당대상업체, 시장조성자, 배출권거래중개회사 ■ (거래방법) 배출권거래소(한국거래소)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 ■ (이월승인 기준) 각 차(34차) 배출권(KAU, KCU)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이월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집합투자업자, 은행 및 보험사,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 추가 ■ 배출권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 가능 ■ 각 차(4차)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 이월 가능 	<p>「배출권거래법」(25.2~)</p> <p>‘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(변경)’(25.6~)</p>
2	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15조 원 규모 보증	■ (신 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녹색전환보증 사업예산 既 반영 ※ 추후 「환경산업지원법」상 지원근거 마련 예정 	
3	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·관리	■ 국가하천 81곳(3,802k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가하천 89곳(4,069km, 267km ↑) * 지정 8곳(247km, 주천강·단장천·동창천·위천·병천천·조천·오수천·천미천) + 연장 2곳(20km, 갑천·삼교천) 	국가하천 지정·변경고시(25.1~)
4	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	■ (신 설)	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, 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등 규정	「수도법」(25.1~)
5	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간 0.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 전 등록 의무 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업허가 대상 ■ 취급시설 검사 실시(1~2년 주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간 1.0톤 이상 등록의무 ■ 신고대상(1.0톤 미만)은 신고정보 대국민 공개 및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■ 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으로 영업허가/신고로 차등화 ■ 위험도·취급량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(1~4년 주기) 	<p>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(25.1~)</p> <p>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(25.8~)</p> <p>「화학물질관리법」(25.8~)</p>
6	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평가 불가 ■ (신 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도 조례평가 실시 가능 ■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신속·심층평가 시행 근거 마련 	<p>「환경영향평가법」(25.2~)</p> <p>「환경영향평가법」(25.10~)</p>
7	청년,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신 설) ■ 다자녀가구(개인)이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(국비)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년(19세~34세)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(국비)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 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* 추가 지원 * (2자녀) 100만원, (3자녀) 200만원 (4자녀 이상) 300만원 	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25.1~)
8	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신 설) ■ 배달 다화용기 이용시 1천원/회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센티브 지급항목 추가 - 공영자전거 이용 - 잔반제로 실천 ■ 2천원/회 지급 	‘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’(25.2~)
9	건강환경피해조사·분쟁조정·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피해조사) 환경부 ■ (분쟁조정)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■ (피해구제) 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 	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통합처리	<p>「환경보건법」,</p> <p>「환경오염피해구제법」,</p> <p>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」,</p> <p>「석면피해구제법」,</p> <p>「화학제품안전법」(25.1~)</p>
10	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	■ (신 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- (대상) 전국 지자체 - (목표) '25년: 50% → '45년: 80%로 확대 	「바이오가스법」(25.1~)